



주간 통일정세

2013-2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자강도 노동자들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6/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강도 강계트랙터종합공장 체육관에 모란봉악단을 불러 노동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태성·황병서 노동당 부부장, 윤동현·김택구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강관일, 홍영철과 류영섭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함께함.

- **北, 6·25 맞아 對美 복수·병진노선 다짐(6/2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25일에 박봉주 총리, 김기남·최태복·김양진·문경덕·곽범기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로두철 부총리 등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 대회'를 열었다고 보도함.
 - 연설에 나선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반미 전면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 있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가공직장, 열처리직장, 조립직장 등 공장 여러 곳을 돌아보고 설비 현대화 상태와 생산 상황을 점검함.
 - 김 제1위원장은 "적은 원기를 들이면서도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한 것이 마음에 든다"며 "공장에서 맡겨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면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치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함흥시 기계공장 잇달아 시찰(6/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제1위원장이 1969년 건립된 함흥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 조립직장, 가공직장 등 여러 곳을 둘러보며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품 개발과 생산에서 지난 시기의 기준과 대담하게 결별해야 한다"며 "하나의 기계 제품을 생산해도 세계적으로 발전된 기계 제품들의 성능과 기술적 지표들을 압도할 수 있게 만들고 다목적, 다기능 설비로 완성하며 국산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동향

- 6/24, 김정은 黨 제1비서, 자강도 노동계급들과 모란봉악단 공연(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체육관) 관람(6.24,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박태성, 강관일, 황병서, 홍영철, 운동현, 박정천, 김택구, 류영섭(자강도 당책)
- 6/24, 김정은 黨 제1비서, 장자강공작기계공장 현지지도(6.24,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박태성, 강관일, 황병서, 홍영철, 운동현, 박정천, 김택구 동행
- 6/29, 김정은 黨 제1비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 현지지도(6.29, 중통·중·평방)
 - 박태성, 황병서, 홍영철, 운동현 동행
 - 림광철·리장미 군관 부부, 6.18 김정은에게 '감사 편지'(아들의 무료 심장수술 소생, 사회주의 보건제도 혜택 찬양) 전달(6.28, 중통·중방)
- 6/30, 김정은 黨 제1비서, 신흥기계공장(1969.10.29.창립) 현지지도(6.30, 중통·중·평방)
 - 최룡해, 박태성, 황병서, 홍영철, 운동현, 박정천, 주도현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검덕지구 대흥청년영웅광산 등 여러 곳 생산정형과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현지요해(6.24,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미림 승마구락부·문수물놀이장 건설정형 현지 요해(6.25,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평안북도 '봉화화학공장·양책베어링공장·염주군 내중협동농장' 현지요해(6.29, 중통·중방)

나. 군사

- 北노동신문 "軍민협동작전은 병진노선 관철 원동력"(6/28,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군민협동작전으로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혁명적 단결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군민협동작전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모



든 전선에서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군민협동작전을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 서로 협조하고 보조를 맞추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여 최상의 성과와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라고 규정함.

● **北 강원도 최전방지역 개발 이유...체제 과시용(?)**(6/30, 연합뉴스)

- 북한이 휴전선에 인접한 강원도 세포등판 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체제 선전의 목적까지 내비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6월 13일 군민대회에서 낭독된 '세포등판 개간 전투원들이 전국 근로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군사분계선 너머의 목장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세포등판에서 기어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함.

다. 사회·문화

● **북한 선수 3명, 아시아역도선수권서 금메달**(6/23, 평양방송)

- 작년 런던올림픽의 역도 메달리스트인 북한의 김은국, 엄윤철, 량춘화 선수가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평양방송이 23일 보도함.

● **北, 아시아역도선수권서 또 금메달...국가별 순위 1위**(6/25, 조선중앙통신)

- 201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69kg급 경기에 출전한 북한 려은희 선수가 인상 118kg, 용상 145kg의 기록으로 각각 1위, 합계 1위에 올라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북한 대학생들, 인터넷상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서 1위**(6/28, 노동신문)

- 북한 대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열린 인도 국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코드셰프'(CODECHEF)에서 1등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전함.
- 신문은 코드셰프 대회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경진대회 가운데서 규모가 비교적 크고 높은 급의 정보기술분야 경연이라며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연에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고 권위있는 프로그램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참가해 각국의 지적잠재력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경연으로 주목된다"고 소개함.

● **북한 예술인들, 러시아 콩쿠르서 잇달아 입상**(6/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예술인들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음악 콩쿠르에 잇달아 입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전함.
-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예술 콩쿠르에 참가한 북한의 인민내무군 협주단 소속 백성혁과 송경업이 기악 앙상블



부문에서 특등을, 비안과 아코디언(손풍금) 독주 부문에서 각각 1등을 함.

-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25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평양음악학원 교원인 박현철도 비안과 아코디언 독주 부문에서 2등을 차지함.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개성市 역사 유적들(왕건왕릉·공민왕릉·개성남대문·개성성·송양서원·표충비·선죽교·고려성군관·만월대·개성첨성대·칠릉떼·명릉떼), 세계문화유산 등록 결정(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 보도(6.24,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영화대학-中 영화학원 자매결연(6/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베이징발로 보도로 "평양연극영화대학과 베이징 영화학원 사이의 친선대학 관계설정에 관한 합의서가 24일 베이징에서 조인됐다"며 김응진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장과 장후이진(張會軍) 베이징 영화학원 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 中 지린성, 북한서 위탁가공 의류 국내산 간주(6/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지린성 검험검역국은 최근 원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해 가공한 의류를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해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북한 올해 쌀 생산량 5.6% 감소 전망(6/25, 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식량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 예상치는 지난해 생산량인 180만t보다 10만t(5.6%) 줄어든 170만t이라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유엔, "북한 외교관 불법 거래 경계" 촉구(6/25, 연합뉴스)

- 유엔이 24일 핵물질이나 금수품목의 밀거래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과 관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보고서는 "북한 대사관이나 상주 공관, 무역사무소 등이 있는 나라는 북한 외교관과 관리들을 특히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와 오



스트리아, 콩고공화국 같은 나라에서 북한 관리들이 기밀 정보수집이나 무기 금수 조치 위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회원국의 주의를 당부함.

- **어나니머스 공격 주장 北사이트 일부 접속 불가(6/25, 연합뉴스)**
 - 25일 오전 10시까지 접속되던 북한 웹사이트들은 어나니머스 일원을 자처하는 한 해커(트위터ID: @Anonsj)가 해당 사이트의 '탱고다운'(Tango Down: 해커들이 특정사이트를 마비시켰을 때 쓰는 용어)을 주장한 직후부터 접속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해커가 해킹했다고 주장한 북한의 웹사이트인 노동신문, 내나라, 고려항공,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벗, 류경, 려명 등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속되지 않음.
- **北 '열병식 공개 TEL차량' 대당 56억원에 中서 수입(6/25,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4월 열병식에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차량을 대당 3천만위안(56억원 가량)을 주고 중국 회사에서 수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사용 목적을 속이고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이 차량을 수입한 뒤 개조한 것으로 최종 판단함.
- **北 고려항공, 평양-말레이시아 노선 8월 재개(6/26, 말레이시아 리저브)**
 - 말레이시아 일간지 '말레이시아 리저브'는 26일 고려항공이 올해 8월 4일부터 평양~쿠알라룸푸르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고 이 노선에 러시아제 투폴레프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중국 지린성, 북한관광 통행증 발급지 확대(6/26, 중국신문사)**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인의 북한관광에 필요한 통행증을 발급하는 지역의 수를 통화(通化), 바이산(白山), 옌벤(延邊) 등으로 늘리고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북한 출입국통행증을 정식으로 발급한다고 중국신문사가 26일 보도함.
- **北교육기금에 국제사회 후원 이어져(6/26, 연합뉴스)**
 -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독일,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의 10여 개 단체에서 '조선교육후원기금'에 각종 자재와 지원금을 후원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조선교육후원기금 홈페이지를 인용해 보도함.
- **WFP, 대북식량지원 지역 3곳 추가(6/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달 1일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함.
 - 이번 조치는 WFP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240만 명에 대한 새로



운 식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며, 양강도 갑산군과 강원도 세포군 등이 추가됨에 따라 WFP가 북한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지역은 기존 82개 시·군에서 85개로 늘어남.

- 유엔 대북제재위에 해상 전문가 총원(6/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해상교통 전문가 닐 와츠씨를 대북제재 전문가로 공식 발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단을 8명으로 늘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내달 첫 회의…본격 활동(6/28, 미국의소리(VOA))
 -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조사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고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방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소냐 비셰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등 북한 인권조사위원 3명과 지원팀이 다음달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힘.
- 北 박의춘, 브루나이 도착…내일 중국과 양자회담(종합)(6/30, 연합뉴스)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낮 브루나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박 외무상 외에 국제기구국의 리홍식 국장 등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브루나이 대사도 겸임하는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도 박 외무상을 수행할 예정임.

■ 기타 (대외 일반)

- 유엔 주재 北 대사, 6.21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 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한반도와 亞-태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6.26, 중통·중방)
- [중통 논평] 美해병대기지의 대부분이 日 오키나와에 집중 전개되어 있는 것 관련 '이 지역에서 군사적 지배권을 유지·강화하여 잠재적 적수들을 견제하고 세계 제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6.26,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미국, 북한과 고위급 양자접촉 방침(6/25, 아사히신문)
 -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고위급 양자접촉을 갖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함.



- 신문은 북미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접촉방법과 관련 미국의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이 제3국에서 회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시기는 최근 성사 직전 무산된 남북대화가 실현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 케리 美국무 "北 핵보유국 불인정...중국 역할 기대"(6/26, 미국의 소리 (VOA))

- 케리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오늘날 진정한 의미에서 핵보유국이 되는 데 필요한 '핵무기를 목적지에 도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그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으며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만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중국의 정책이기도 하다"며 "중국도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함.

● 北노동신문 "南, 주변국에 대북 핵 공조 청탁" 비난(6/30, 노동신문)

- 북한은 30일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에 이른바 '대북 핵 공조'를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이날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끝장내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대북 핵 공조'는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전혀 바라지 않고 있으며 핵문제를 구실로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신뢰프로세스, '비핵개방3000'보다 적대적(6/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본색'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박근혜 정권의 본색은 신뢰프로세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더 적대적이고 대결적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신뢰프로세스와 '비핵·개방·3000'의 공통점은 "핵포기와 개방을 요구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켜 변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는 점에서 "선임자의 것보다 더욱 적대적이고 대결적"이라고 밝힘.



- 또한 "박근혜 정권의 본색은 북을 자극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폐쇄로 몰아넣은 데 이어 북남 당국회담도 수석대표의 격이나 따지면서 회담 자체를 파탄시킨 데서 단적으로 증명됐다"며 "애초부터 북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함.
- **北, 6·25 맞아 "미국은 전쟁 도발 침략자" 주장(6/24, 연합뉴스)**
 - 북한이 6·25를 앞둔 24일 역사학회 비망록을 통해 "미국은 조선전쟁(6·25전쟁)을 도발한 침략자"라며 "조선전쟁은 미국에 의해 발생한 민족분열과 동족대결의 비극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역사학회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60주년을 맞아 조선전쟁 도발자로서의 미제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비망록을 발표한다"며 "조선전쟁은 미국이 전 조선을 타고 앉고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를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타산 밑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침략전쟁"이라고 평가함.
- **北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초미의 과제"(6/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1면에 게재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6·25전쟁을 미국이 남한을 사주해 도발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초미의 과제"라며 미국에 군사연습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함.
 - 사설은 또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긴장완화와 평화,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며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차단봉을 내릴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함.
- **주중 북한대사관 6.25 사진전... '남한의 북침' 주장(6/25,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은 25일 정문 옆에 자리 잡은 대외용 선전 게시판에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을 대거 붙이고 6·25가 남한의 기습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전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北, '국정원 대선개입' 비난... 대화록 공개엔 침묵(6/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괴뢰정보원'이라는 글에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현 집권 세력이 권력기관을 불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시켜 근본적 영향을 줌으로써 보수 정권을 연장하고 유신 독재를 부활시킬 것을 노린 용납못할 정치깡패 행위"라고 주장함.
 - 신문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과 합의하고서도 그에 대해 거부하면서 이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적극 여론화하면서 민심의 이목을 딛 대로 돌려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함.



단 살포를 예고한 29일 "임진각이 서부전선사령부의 직접적인 조준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협함.

-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단체를 내세워 북한에 반대하는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힘.
- 서부전선사령부는 이어 남북당국회담 무산,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거론하며 "이번 뼈라 살포행위는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라고 주장함.

● '전쟁사적지 찾자'...北 정전 60주년 분위기 띄우기(6/3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정전협정 기념일인 다음 달 27일까지 한달 정도 남았지만 최근 북한 매체에서는 전쟁 사적지의 답사 소식이 잇달아 소개되고 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8일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을 맞아 6·25전쟁의 주요 전투장소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군인들의 답사 행군이 서부지구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6일 군인과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이 평안북도 창성군의 창골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소개함.

● 北, '김규식 등 6·25 납북자 인정' 거듭 비난(6/30, 노동신문)

- 북한은 30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가 최근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한 것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명예회복위의 결정은 "(6·25전쟁) 납침설에 그 어떤 신빙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의 반(反)공화국 대결 공조와 북침전쟁 도발 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신문은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 명예회복위가 납북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스스로 월북한 인사들이라며 남한에서 말하는 납북자란 "허위와 날조로 조작된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6·25전쟁]63주년 즈음 현실은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한반도 긴장완화, 정전체제→평화체제 전환이 초미의 과제'라고 주장 및 '반미반전·미군철수와 6.15·10.4선언 이행투쟁' 선동(6.25, 중방·노동신문·중통)
- [6·25전쟁]63주년 관련 '미국과 남한의 새 전쟁도발소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北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도발자들에게 추호의 자비를 모른다'고 위협(6.25, 중통·노동신문)
- [「조평통」대변인 긴급성명(6.2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현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10.4선언을 공공연히 훼손하고 수뇌상봉까지도 정쟁의 농락물로 삼는 정치적 패륜무리, 정치깡패집단, 시정배들의 정치, 외교상식도 남북관계 윤리도 모르는 마구잡이정치'라고 맹비난 및 위협(6.27, 중통·중방·평방)
- '南北 당국회담'에 대한 통일부장관 특강발언(남북현안을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나오라고 한 것 등) 관련 '회담 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발광하는 추악한 물골'이라고 지속 비난(6.26, 중통·노동신문·평방)
- 우리 정부의 '6·25전쟁 63주년 기념식(6.25, 잠실체육관)'과 '2013 호국퍼레이드(6.29 예정, 용산전쟁기념관→서울광장)' 행사 진행 관련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우리(北)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동족대결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反攻화국광대극"이라고 비난(6.27, 중통·민주조선)

● 북한연구센터 제공



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대규모 잔해들이 쌓여있는 것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작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쪽 입구의 터널 추가 건설 △기존 터널 보수 공사 △3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잔해 정리 등 3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 특히, 단순한 터널 공사일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작업이라면 방사능 오염에 따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음.
-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 작업은 추가 핵실험에 필요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음.
- 미국 언론은 이에 대해 올해 초 전쟁도발 위협을 거듭했던 북한이 최근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음.

● <한미일, 내달 1일 외교장관회담...대화 탐색 '2라운드'>(6/28, 연합뉴스)

- 한·미·중 3국이 연쇄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국의 다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한·미·일 3국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릴 브루나이에서 다음달 1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8일 밝혔음.
-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담임.
- 한중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 대응 방안과 비핵화 대화 진전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참여' 카드에 대해 일단 3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됨.
- 앞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2·29 합의 플러스 알파(α)'를 거론한 바 있음.
- 이는 비핵화 대화를 할 때는 북한이 각종 도발 행위와 핵능력 진전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 정부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북핵 문제를 놓고 한미와 사실상 공조를 해온 중국은 대화재개 탐색기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북한의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발언에 호응한 것으로 분석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됨.
-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6



- 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는 과거 수준의 '북한 편들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한·미·일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실제 지난 21일 진행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우리측은 '비핵화 달성에, 중국 측은 '회담 재개 여건 조성'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대화 재개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달 2일 한·미·일 3국과 함께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자와 소(小) 다자 회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분석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도 ARF에 참석,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과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 이런 5자의 움직임에 맞서 북한은 대화 공세 카드를 계속 쓰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군축 차원의 비핵화 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 북한에서는 이번 ARF에 박의춘 외무상이 참석함.
 - 최근 중국을 찾았던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은 조만간 러시아도 찾아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5자 공조의 와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5자의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현재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임.
- <미국, '2·29+α' 실체 공개..북한의 대응은>(6/28,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이른바 '2·29 플러스 알파'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됨.
 - 특히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28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일관, 명확, 확고하다"면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희망하는 중국의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상황이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일정정도 수용할 경우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미국의 입장은 제임스 쉰왈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의 입을 통해 공개됐음. 그는 28일 하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허용하는 등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 등의 대화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파기된 '2·29 합의'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의 핵심이 바로 IAEA 사찰 수용임을 말한 것임.
 - 특히, IAEA의 사찰이 가능하려면 그 대상을 구체화해야 하는 만큼 영변의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다시 말해 북한의 핵시설 신고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될 수 있음. 미국은 영변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UEP 시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대가로 비핵화 조치를 하기로 했던 지난해 북미간 2·29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우리농 농축활동



- 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의 약속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 등을 비핵화 조치의 핵심으로 상정. 주로 북한의 말(약속)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줌왈트 대행의 이번 발언은 "이런 정도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가 가능하겠구나"하는 미국의 기준선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일각에서는 북한이 1993년 탈퇴를 선언했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선언도 미국의 요구사항에 포함돼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줌왈트 대행은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미국은 남북 관계의 부단한 개선을 지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 결국 그의 이날 발언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조건은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이는 지난주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워싱턴에서 합의한 내용의 핵심이기도 함.
 - 줌왈트 대행은 북한의 최근 대화공세에 대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협상할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음. 이는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이기도 함.
 -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하자"는 원칙하에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계속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이 대화재개를 위해 마지막으로 던진 조건을 북한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됨.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다시한번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향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여부는 중국의 중재노력과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마친 중국이 조만간 보다 진전된 대화 재개 방침을 밝힐 경우 대화의 조건을 둘러싼 관련국간 최종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나. 미·북 관계

- <“미국, 북한과 고위급 양자접촉 방침”>(아사히)<(6/25,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고위급 양자접촉을 갖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음.
 - 미국은 북미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음.
 -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이 제3국에서 회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시기는 최근 성사직전 무산된 남북대화가 실현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 하지만 미국이 기존 대북협상 신중론에서 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최근



라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일본은 다른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른바 고노담화를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미 재무부, 제재 목록에 북한 은행 추가>(6/28, 월스트리트저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국 동북 지방에서 영업 중인 북한 은행 한 곳과 고위급 임원 한 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국의 원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조치임.
- 이번 조치는 유엔이 이번달 발표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의 뒤를 이은 것임. 이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는 장비를 입수하고 수출한다는 사실을 강조
- 유엔 보고서는 북한을 출발, 시리아 라타키아항을 거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으로 향하는 미사일 부품을 2012년 7월 압수한 과정을 기록했음. 이 부품은 중국 항구를 거쳐갔음.
- 미 재무부 관리들이 27일(목) 발표한 제재는 북한 대동신용은행과 북한 핵 프로그램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거래한 혐의가 있는 은행 고위급 임원 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김철삼 대표로 알려진 이 고위급 임원은 중국 동부 다롄 지방을 거점으로 "북한 관련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관리한 혐의가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음. 대동신용은행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와 중국에 사무실을 둔 DCB파이낸스라는 위장회사를 이용해 왔음.
- 미 재무부에 따르면 대동신용은행과 김씨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을 대신해 거래를 해왔음. 두 회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미 유엔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상태
- 유엔 규정에 의해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활동을 돕는 회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의무가 있음.
- 목요일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관련 척후병인 데이비드 코헨 차관은 중국 정부가 대동신용은행과 김씨의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또한 그들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코헨 차관은 "세계 각국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주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요일 주미 중국대사관 경수양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대동신용은행은 유엔 보고서가 기술한 시리아행 미사일 부품 수송과는 관련이 없으나 두 건 모두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보여줌.
- 널리 알려진 바가 없는 시리아행 미사일 부품은 중국 동북지방 텐진에



서 중국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에 실렸다고 유엔 보고서는 밝혔음. 남한 정보기관이 압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사일 부품은 납 파이프라고 허위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북한의 국제 제재 위반을 검토하는 유엔 패널에 인도됐음.

- 유엔 보고서는 "중국 측에 따르면 시리아 회사가 중국 중개인을 통해 부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중국 회사는 해당 화물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시리아는 자국에 내려진 제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월 핵무기 실험 이후 최근 몇 달 간 중국에게 북한 자금을 제재하라는 압력을 계속해 왔음. 미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을 공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긴장한 상태였음.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음.
 -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지난 5월 국영 중국은행은 북한의 주요 외환 거래 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끊었다고 발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경고로 봤음. 미국 정부를 향한 위협 수위를 낮추라는 경고임.
 - 그러나 한편으론 중국은 국내 경제 개혁을 촉진하기 대북 무역과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 중국은 북한 국경 부근에 초고속 철도, 고속도로 및 교량을 건설하고 최초로 국가간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음.
 - 미 정부 관료들은 중국이 대동신용은행과 김씨의 활동을 중단시킬지 여부가 중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북한 IAEA사찰 허용 등 조치해야 대화 가능">(6/2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허용하는 등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해야 북핵 6자회담 등의 대화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또 남북 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제임스 쥘왈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와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미동맹의 향후 과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쥘왈트 차관보대행은 워싱턴DC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은 남북 관계의 부단한 개선을 지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 이어 "북한이 최근 태도를 바꿔 북핵 6자회담 당사국에 손을 뺀고 있지만, 한반도의 증명 가능한 비핵화라는 핵심 현안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 돼 있다는 확고한 조치가 아직 없다"고 평가했음.
- 그러면서 미국은 2005년 9·19 비핵화 공동성명의 이행과 북한의 불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 조치를 통한 국제 의무 준수를 위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벌이겠다고 부연했음.
 -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복원을 예로 들고 이런 조치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상당히 줄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단순히 도발을 멈추거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해서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셈임.
 - 줌왈트 차관보대행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핵 현안을 논의한 것이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그는 "미국은 중국과 북한 이슈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해왔으며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도록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매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과 북한 주민의 복지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핵도 보유하고 국제 사회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주민 삶도 개선하는 이른바 '병진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줌왈트 차관보대행은 덧붙였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지린성, 북한관광 통행증 발급지 확대>(6/28, 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중국인의 북한관광에 필요한 통행증을 발급하는 지역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전했다.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지린성 공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통화(通化), 바이산(白山), 연변(延邊) 등 북한 접경지역에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도 북한 출입국통행증을 정식으로 발급한다고 밝혔음.
 - 통신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들 북한 접경지역을 찾는 자국 관광객이 신분증과 사진 제출만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변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음.
 - 중국 공안부는 지난 2005년 북한관광에 나서는 중국인들의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외지인에 대한 북한관광 통행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접경지역 주민에게만 통행증을 발급해왔음.
 - 2010년 4월 중앙정부가 북한을 단체관광 대상국가로 허용하면서 같은 해 7월 시범적으로 연변에서 외지인 북한 통행증 발급 업무를 재개했음.



-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지난 4월 초부터 1개월 이상 북한 관광을 중단했던 연변, 단둥(丹東) 등 접경지역 여행사들이 최근 부분적으로 관광객 모집을 재개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나 해당 지방정부는 북한관광이 아직 공식적으로 재개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 지린성 여유국(관광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안전을 고려해 북한관광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주목하고 있으며 관광객 안전이 보장되면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일·북 관계

● <일본, 북한미사일 요격태세 금명 해제>(6/28,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난 4월7일 자위대에 내렸던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이르면 28일 해제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명령을 내릴 당시와 같은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발사가 임박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 동해(한국의 동해)와 국내 각지의 요격 태세를 풀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당초 정해진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의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이지만 앞당겨 해제하게 됐다.
-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상공에서 파괴할 권한을 미리 자위대에 부여하기 위해 발령함.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이 동해 쪽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 명령을 내렸고, 방위성은 그에 따라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파견하는 등 요격준비 태세에 들어갔음.

마. 러·북 관계

● <북한 김계관, 내달 4일 러시아 방문>(6/29, 연합뉴스)

-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다음 달 4일 러시아를 방문해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외무부 공보실은 이날 "4일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김 제1부상이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실은 "이 협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김 제1부상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과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김 제1부상은 지난 18~22일 중국을 방문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 전략 대화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했음.
- 김 제1부상의 최근 활발한 행보는 북한의 대화 공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됨. 북한은 최근 김 제1부상은 물론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 등을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재개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음.
 - 중국 방문에 이은 김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은 또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일본·한국 동맹에 맞서기 위한 지지 세력 확보 노력으로도 해석됨.
 - 김 제1부상은 러시아 측에 북한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계국간 회담을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내달 2일 첫 방위비협상...美 요구내용 주목>(6/26, 연합뉴스)
 -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첫 협상이 다음 달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림.
 - 미국에서 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효된 상태에서 이번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관측됨.
 -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요구안을 처음으로 공식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에 시작되는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분담률. 미국은 현재 40%대인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우리 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 최소 50% 이상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공개한 바 있음.
 - 나아가 미국 의회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 여기에다 지난 3월 발효된 시퀘스터로 앞으로 10년간 9천500억 달러의 국방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미국의 분담률 인상 요구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임.
 -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투병력 감축가능성 시사 등 고강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음.
 - 미국은 이번 9차 SMA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내달 2일 회의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공개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특히, 정부 내에는 50% 수준이 공정한 분담률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음. 미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이 미 측이 이야기하는 40%보다 높다는 이유에서임.
 -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런 간접지원까지 포함해 현재의 방위비 분담률을 60%대로 추정하고 있음.
 - 외교부는 26일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측 간 이런 입장차에 따라 올해 방위비 협상도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 앞서 진행된 제7·8차 SMA 협정도 5~6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뒤 각각 2006년 말, 2008년 말 타결됐음.
 - 미국은 재정·무역적자 누적으로 국방비가 삭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음. 이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미국과 SMA를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음.
 -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에 대한 특별협정 형식임. SOFA는 5조 1항에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게 돼 있는데 SMA는 이에 예외를 두는 협정이기 때문임.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 건설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음. 주한미군의 월급 등은 미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통틀어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으로 부르고 있음. 미국은 전체 주둔비에서 NPSC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담률로 계산하고 있음.
 - SMA는 2~5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적용된 제8차 SMA는 올해로 끝남.
 - 분담금 계산 방식은 △원화 경비의 3분의 1 부담 △달러기준 매년 10% 증액 △총액 결정 △총액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의 방식으로 변화해왔음.
 - 분담금 규모는 1991년 1천73억 원에서 올해 8천695억 원으로 증가했음.
- <미국 하원,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결의안 추진>(6/29, 연합뉴스)
-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하원의원 4명이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음.
 -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찰스 랭글(민주·뉴욕),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샘 존슨(공화·텍사스),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최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H. CON. RES. 41)'을 발의했음.
 - 한국전쟁 발발 63년째인 지난 25일 발의된 것으로, 정전 60주년인 내달 27일을 전후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게 목표임.
 - 미국 하원의원 가운데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이들 4명은 박근혜 대통령



- 이 지난달 초 미국 방문 당시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때 한 명씩 호명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은 바 있음.
- 이들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결의문을 통해 한국전쟁 발발 및 정전 협정 체결 등 당시 상황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나열하고 나서 의회가 이 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음.
 - 결의안은 북한에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이끌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 법을 지키고 핵확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음.
 - 랭글 의원은 "한국전 참전 용사로서 60년 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웠고 그동안 평화와 통일을 지지해왔다"며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수백만 명이 정치에 의해 서로 갈라진 것은 비극이다. 이 결의안은 남북 간의 외교를 통한 평화를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라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그는 "남북 간 평화와 통일 논의의 진전은 지역 및 세계 안보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랭글 의원실은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핵 6자 회담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보인 시점에서 이번 결의안이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나. 한·중 관계

● <한반도 비핵화...남·북·중의 다른 속내>(6/28, 연합뉴스)

- 한중 양국은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음.
- 최근 북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남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통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로 꼽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견해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음. 한반도에서 핵개발을 하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는 점에서임.
- 그러나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곧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는 입장임.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미국 등)은 우리한테서 핵무기를 빼앗아내면 비핵화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양측간) 차이점"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 북한 국방위 대변인도 지난 17일 북미 고위급 대화를 제안하면서 "우리(북한)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면서 '핵 없는 세상' 건설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 북한의 이런 입장은 미국과 핵 군축대화를 하지는 속내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임.
 -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 입장에 가까움.
 - 그러나 27일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핵 불용'이란 표현은 수용하지 않았음.
 - 이는 북한을 배려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뉘앙스가 다소 한국, 미국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있음.
 -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개발은 물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국의 핵 전력의 한반도 전개까지도 경계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유에서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8일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 군사훈련 과정에서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공동 성명에 포함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역시 한미 군사훈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정부 "공동성명 계기 한중FTA 협상 가속화할 것">(6/28, 연합뉴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한중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음.
 -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수행중인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베이징(北京) 시내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하고 "1단계 협상이 그동안 5차례 열렸지만 빠른 진척을 보지 못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은 것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음.
 - 윤 장관은 이어 "가장 핵심 쟁점이 된 상품분야 자유화율에서 어느 정도 합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견이 좁혀졌다"며 "구체적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지만 7월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연내에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짓고 2단계 양허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음.
 - 조 수석은 또 "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FTA를 의제로 먼저 거론한 것은 중국측이었고 양 정상이 회견에서도 비중 있게 FTA를 다루며 양국 실무자에게 방향성이 있는 중요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여 협상에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
 - 조 수석은 아울러 양국 정상이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이 FTA에서 다룰지 다루지 말지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MOU가 FTA 조기 타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언론 "일본 따돌린채 한·중 밀월">(6/28, 연합뉴스)

- 일본 매체들은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큰 관심을 보였음.
- 논조는 대체로 '경계섞인 시선'을 담고 있었음.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후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는 터에 박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2순위로 일본을 방문하던 역대 한국 대통령의 순방 관례를 깨고 중국을 일본보다 먼저 방문한 것 자체가 반가울리 없는 일인 까닭임.
-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회담 결과물로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국가 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데 대해 일본 매체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일본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본을 겨냥한 한·중의 협공이라고 진단한 것임.
- 28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을 따돌린 중국과 한국의 밀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중의 밀월'을 연출함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는 절호의 기회로 본 것이 틀림없다"면서 "박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표명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적었음.
- 아사히 신문은 '중국과 한국 정상이 일본을 비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연대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진단했음.
-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점을 지적, "박근혜 정권이 일·미·한의 구도를 탈피해 미·중·한의 구도를 선택한 의미"라며 "앞으로 역사인식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이 연대해 일본을 비난하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음.
- 니혼게이지(닛케이)도 "북한 문제에서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과 한국이 하나로 묶이면 일·미·한 사이의 협력은 뼈저리게 된다"고 지적한 뒤 "한국의 미·중·한 전략대화 구상이 실현되면 한반도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저하된다"면서 "아시아 파워게임에서 '일본 제외'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음.
-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배려 또는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음.
- 요미우리는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중국이 정상회담 사전 조율 과정에서 영토문제를 의제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이 '제3국 화두는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으며, 오히려 연내 일본을 포함하는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포함했다고 소개했음.



- 산케이 신문은 공동성명의 역사 관련 언급이 정상회담 당일 오후 언론에 사전 배포된 합의문 원안에 없었던 표현이라고 소개하고, 중국의 강한 요구에 따라 막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명 내용을 둘러싸고 발표 직전에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는 한국 정부 소식통의 언급을 소개했음.
 - 아울러 닛케이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보도했음.
 -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중시외교를 펴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형성 구상의 출발점을 한국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음.
 - 또한 신문은 "한·중 간 접근은 한국이 중국으로 바짝 다가섰다고만 볼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일본 방문에 앞서기 까지 중국의 노력이 있었으며,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박 대통령을 환대한 배경에는 미·중 간의 격렬한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고 소개했음.
- <한일, 내일 새정부 출범후 첫 외교장관회담>(6/30,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다음달 1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됨.
 - 정부 당국자는 30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음.
 - 이번 회담은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이유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22일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성사된 것임.
 - 윤 장관의 방일 취소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과거사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이 최근까지 계속됐음.
 - 이 때문에 한일 외교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ARF에서도 양자 회담은 성사가 불투명했음.
 - 실제 윤 장관은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수행차 출국할 때까지도 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소식통은 "역사 문제는 엄중하게 하되 그 외의 분야는 협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면서 회담 개최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관계 안정화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특히, 윤 장관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퇴행적 언행이 한일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회담이 통역 시간까지 포함해 30분만 예정돼 있어 심도있는 논의는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일각에서는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



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은 대화 테이블로 나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인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국제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미국 '도피방조' 비판 수용 못 해" 반발>(6/28,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출국을 방조했다며 홍콩과 중국 중앙정부를 싸잡아 비난하자 중국이 반발했음.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미국이 중국 중앙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자국 비판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음. 그는 이어 홍콩의 결정도 옹호했음.
- 화 대변인은 "홍콩 특구정부는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므로 이는 나무랄 것이 없다"며 "각국은 모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화 대변인은 미국이 홍콩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공격
- 화 대변인은 스노든의 홍콩 출국으로 미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미국의 공세와 관련,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의 이익은 물론 아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유리하다"며 "미국이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찰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화 대변인은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스노든이 정보 자유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로 도주한 것을 비판했다는 지적에 "미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참으로 이상하다"며 "이들은 먼저 거울을 들고 자기를 비춰봐야 할 것"이라고 공박했음.
- 화 대변인은 이어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중 기준'을 들이대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음.
- 화 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도 내달 열릴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정부의 인터넷 해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음.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중국의 (스노든의 러시아행 방조) 결정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미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을 비롯해 미국은 스노든의 홍콩 출국과 관련해 중국과 홍콩을 비난했음.

마. 미·러 관계

● <스노든 사건, 미국-러시아 외교 갈등 표면화>(6/28, 연합뉴스)

-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홍콩에 은신하다 러시아로 도피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두고 미국-러시아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 "센카쿠, 중국에 반환해야">(6/29, 조선일보)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를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토야마 전 총리는 27일 중국 칭화(淸華)대 주최 세계평화포럼에서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카이로 선언은 '흠친 것은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반환해야 할 영토에 센카쿠 등) 대만 이외의 섬도 포함된다고 중국 측이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둘려달라'고 하는 중국의 주장은 성립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8일 보도했음.
 -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강탈한 만주·대만·평후(澎湖)제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빼앗은 모든 지역에서 일본 세력을 몰아낸다'는 문안을 담았음.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했고, 일본은 포츠담 선언이 정한 항복 조건을 받아들였음.
 - 중국은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을 통해 대만을 빼앗으면서 부속 도서인 댜오위다오(센카쿠)도 강탈했다는 입장임.
 - 하토야마 전 총리는 또 "40년 전 중·일 양국이 (센카쿠 문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할 당시인 1972년 무렵 중·일 간 센카쿠 문제를 유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것임. 이는 '유보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임.
 -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5일 홍콩 봉황TV 인터뷰에서도 "중국 측에서 보면 일본이 (센카쿠를) 흠쳤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었음.

- <아베 "中, 정상회담 조건으로 센카쿠문제 양보 요구">(6/29, 연합뉴스)
 - 중국 측이 중·일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장했다.
 -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8일 인터넷 매체가 주최한 당수토론에서 "중국 측은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일정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베 총리는 중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음. 하지만 일본 언론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중국 측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그건 틀렸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며 "정상 간 교류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상회담을 하려고 국익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 한편, 중·일 양국은 지난해 5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회담한 뒤로는 정상회담을 열지 않고 있음.



사. 중·러 관계

- <“러시아, 중국에 S-400 미사일 판매 결정”>(6/22, 연합뉴스)
 - 러시아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대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대만 언론이 28일 보도했음.
 -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는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군사전문 잡지 '칸와디펜스리뷰' 최신호를 인용, 러시아가 중국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희망해온 S-400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판매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km로 중국 남부 푸젠(福建) 일대에 배치될 경우 센카쿠와 대만 전역 등을 공격 범위에 들 수 있음.
 - 칸와디펜스리뷰는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계약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중국은 이 미사일이 도입되면 관련 첨단 기술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3월 러시아산 수호이-35 전투기 24대와 아무르급 잠수함 4척을 도입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하는 등 최근 군사 무기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